朴-李 '자숙' 하루만에 전투모드 돌입

〈근혜〉 〈명박〉

"행정도시 반대론자와 어떻게" VS "공동유세 불발이 원인"

재보선 패배 서로 "네 탓" 공방…"이러다 갈라서나" 우려도

한나라당이 4·25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또 다시 각을 세우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에서 '박·이간 다툼이 선거 패배의 최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숙모드'를 보인지 불과 하루만에 '전투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그것도 재보선 패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네탓 공방'이 갈등 재연의 단초가 되고 있다.

두 사람의 '공동유세 무산'이 유권자들에게 당의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은 행정도시 반대론자였던 이 전시장 책임론으로 역공을 펴고 나왔다.

박 전 대표측 한선교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전 보선에서 승리한) 심대평 후보는 충남지사 시절 자민련을 탈당하고 행정도시 유치를 위해 투쟁을 한 사람이지만 이 전시장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도시를 막겠다'고 말한 분"이라며 '이 전 시장 책임론'을 제기했고, 곧이어 박 전 대표가 27일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이 전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인터뷰에서 "공동유세하고 이벤트나 벌이면 대전 시민의 마음이 바뀌었겠느냐"며 "군대를 동원해 행정도시를 막겠다는 분과 유세를 같이 했으면 표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박 전 대표측이 공동유세 거부에 따른 당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도발'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눈치다.

이 전 시장측 캠프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단 정면 대응은 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의 '무대응 전략'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캠프 내에서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했는데 그래도 언론에서는 같이 싸우는 걸로 보도된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핵심 측근은 "우리가 박 전 대표를 향해 '독재자의 딸과 당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 좋겠느냐"며 박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기도 했다.

양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재보선 한번 졌다고 흔들리면 나라는 어떻게 맡겠느냐"며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 전 시장측은 "당의 쇄신이 불가피한 심각한 문제"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양대 대선주자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직자는 "당 대표가 사퇴 여부를 놓고 칩거에 들어간 엄중한 상황에 주자들이 패인을 놓고 네탓 공방이나 하고 있을 때냐"며 "이러다 정말 당이 쪼개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어업인 면세유 공급 영구화해야"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27일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중단위기에 처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관련 영구 면세화를 촉구하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영구 법제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한·미 FTA 타결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감세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농어업인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농어촌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더욱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병(민주·나주1) 의원은 "농수산물의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서 면세유 영구 법제화는 농촌 환원의 첫 걸음"이라며 "면세유는 현행과 같이 농어업인에게 계속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유 감세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어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6천억원, 전남에서는 1천95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을 국회를 비롯해 4당 대표,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에 통보해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영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3~5년 주기로 공급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00% 감세 혜택이 75%로 축소되고 2008년 1월부터 아예 폐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송재구씨 해촉은 문광부 건의 따른 것"

靑, 조영택·유희인씨 등 '보은인사' 논란 반박

청와대는 27일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내정과 유희인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공군 소장 진급 등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영택 전 실장은 위원장으로 충분히 적합한 인사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그 자리는 문화적 감각과 행정적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전임 송재구 위원장이 임명 6개월 만에 해촉된 데 대해 "청와대가 어떤 인사적 주문을 한 게 아니라 문광부가 먼저 건의해왔기 때문"이라며 "그 사유는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핵심관계자는 "송 전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의 큰 틀을 흔들었다고 한다"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인적쇄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유희인 비서관이 인력운용상 필요에 따라 지난 2005년 2년 임기의 준장으로 진급한 뒤 올 10월 전역을 앞두고 다시 소장으로 진급한 데 대해 "임기제 진급 기한은 2년이며 재연장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보은인사 주장을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도개혁 통합신당(가칭) 광주시당은 27일 광산구 콜럼버스웨딩홀에서 국회의원과 당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갖고 위원장에 양형일(왼쪽에서 네번째) 의원을 선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도개혁 통합신당 광주시·전남도당 창당

광주시당 위원장 양형일 의원 전남도당 위원장 주승용 의원

중도개혁 통합신당(가칭)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7일 창당대회를 갖고 위원장에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과 주승용 의원(여수 을)을 각각 선출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5시 광산구 콜럼버스웨딩홀에서, 전남도당도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졌으며 이 행사에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조일현 의원과 김한길,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을 포함 당원 1천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이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열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행동할 때"라며 "광주시당 창당을 계기로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향한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개혁 통합신당에는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인 통합신당추진모임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빛日만평

- 김종두

차제에 불쏘시개로나…

'3대 쟁점법안' 4월처리 물 건너가나

여야, 사학법 개정안 합의 또 실패…빅딜 성사도 미지수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삼각 빅딜'이 한때 잠정 합의안까지 도출하면서 급진전을 보였지만,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 내용을 놓고 우리당 내에서 반발이 일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양당은 회기 종료일을 사흘 앞둔 27일 협상 창구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에서 원내 수석부대표선으로 낮춘 채 다시 조율을 시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선 이미 단일안이 마련된 만큼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만 합의한다면 로스쿨법까지 일괄 타결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추천위 구성비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양측은 학운위(또는 대학평의회)측과 이사진측 인사의 비율을 동수로 하는 한나라당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학운위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일부 종교사학만 동수를 허용하는 우리당 안도 수정안으로 올려 표 대결을 벌이는 절충안을 논의중이지만 이 역시 우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내부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학법 절충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은 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부터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표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설

조영택 내정자 조성위 위상정립부터 해야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전임 위원장이 문광부와 마찰로 6개월 만에 해촉되고 민간위원 7명이 집단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위원장에 내정된 것이다. 청와대는 조 내정자가 문화적 감각과 행정적 추진력을 갖춰 조성위원장으로 적합했기 때문에 발탁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놓고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조 내정자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주도해야 할 조성위원회는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발족 당시부터 역할과 기능을 둘러싸고 문광부 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조성위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을까. 조성위의 표류가 계속돼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 내정자는 조성위의 위상과 정체성부터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 랜드마크를 놓고 문광부와 광주시, 지역민 간의 불협화음도 조 내정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 내정자도 이 점을 의식해 "문광부, 광주시, 시민단체와 문화중심도시를 이끌어 나갈 여러 분야의 조직과 계층에서 가교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충실한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여론부터 수렴하고 이를 한목소리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시민의 운명과 국가 발전을 담보할 중요한 사업이다. 조 내정자는 조성위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 드러난 병역비리…수사 전국 확대하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된 병역비리가 또 불거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병역특례업체 6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병역비리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주로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체의 생산과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의무 대상자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병역특례자들은 산업체에 근무하며 활동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기능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문제는 병역특례자 선발과 관리를 업체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특례자를 채용하면서 1인당 2천만~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등 자격미달자들을 채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자녀나 친척 등을 불법으로 편입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검찰 주변에선 병역비리 연루자로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회지도층이 빠지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명색이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식들은 뒤로 빼돌린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조사 대상업체가 100여 곳에 달한 만큼 조직적인 비리의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병역특례업체는 8천500개나 되고 3만6천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 특례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터키 '여수엑스포' 지지

재무장관, 현대차 준공식서

케말 우나크탄 터키 재무장관은 27일(터키 현지시간) 터키 정부가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말 우나크탄 장관은 이날 현대차 터키공장에서 열린 현대차 터키공장 10만대 확대 준공식에서 "터키는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현대차가 전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등 민간기업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여수엑스포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선 것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서갑원 의원과 함께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총리를 비롯해 터키 외무장관, 환경장관 등 터키 정부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조상래 도의원 우리당 탈당

전남도의회 조상래(곡성1) 의원이 27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창당한지 불과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창당 당시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어지고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적 정당에 참여해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도개혁통합신당에 입당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벨 사령관 발언 부적절"

김장수 국방장관 밝혀

김장수 국방장관은 27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 균등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재고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휘관은 예하 부대원의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2사단 재배치나 용산기지 이전은 양국 정부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사령관이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